

이 대통령 재판 사실상 무기 연기

‘헌법 제84조’ 따라... 법원,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1심 등
尹 관련 수사 급물살...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따라 특검 임명시 수사 ‘속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이 추후지정으로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중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9일 서울고법에서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미루게 되어 10일 서울중앙지법도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퇴임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형사 재판을 정치시키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벌써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가권이 격랑에 빠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오는 12일까지 다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윤 전 대통령 측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수사관들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데 있다.

경찰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입건했다. 당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군 관계자들에게 비화 통신기기(비화폰) 삭제제를 지시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계엄 선포 이후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기록 전체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 CCTV를 확보해 계엄령 공포 회의 과정도 분석 중이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 여인영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른바 ‘3대 특검법’이라 불리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정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신속하게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해병대원 등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편향적 역사교육 강요 교단 쿠데타 좌시 못해”

도의회,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 박탈 촉구 결의안’ 본회의서 채택
김동구 도의원 “우리 역사 유린에 분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는 10일 열린 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 2·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발의한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박탈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헌법적 정치선동과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들의 문제 행태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강사들은 극우적 역사관을 교육 현장에 강요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활동까지 벌였으며, 리박스를 사무실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 홍보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동구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며, 교단에 서는 강

사와 교사는 그 수호자”라며 “교실을 사상의 혼란소로, 철관을 정치선동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자들은 선동가이자 반지성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왜곡하고, 어린 학생들의 의식 형성에 정치적 목적을 개입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교육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주문은 △교육부는 리박스를 출신 늘봄학교 강사들의 자격을 박탈할 것 △늘봄강사 채용 및 배치 과정에서의 특정 정치 세력의 조직적 개입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정치적 목적을 띤 편향 교육을 방조한 관계자 및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1960년 4월 19일을 거치고 1980년 5월을 넘어 1987년 6월 지금의 민주주의를 성취시켰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2025년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목도하고 분노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



1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선 이후 전북 공약의 이행 전략과 국정과제 반영 방안 등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농생명산업지구 3개소 지정 | 생산 등 집적화... 전북 농업 신성장거점 육성 목표

남원 ECO 스마트팜지구 등... 3곳에 2155억 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등 총 3개 지구를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농생명산업지구는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라 마련한 개념으로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을 집적화해 산업 전후방 연계를 강화하고, 전북 농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따라 이번엔 처음으로 지정·고시하는 3개 지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9개 세

부사업에 2,155억 원을 투자하여 지구별로 맞춤형 농생명산업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는 60ha 부지에 대규모 창업단지과 스마트팜시설을 조성해 농생명 스마트팜의 허브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7ha)는 국내 유일의 홍삼특구를 기반으로 유통, 가공, 홍보체험관 등 시설을 집적화해 고부가가치 홍삼 산업을 선도한다.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16ha)는 연중 안정적 김치 원료 공급, 스마트팜 기술 등을 포함한 김치 복합단지로 조성해 국가적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남원 스마트팜 지구는 퍼시픽

투자운용사 등과의 협력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추진하고, 고창 김치 지구는 대상, 나리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김치산업을 육성한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은 농생명산업의 첨단화, 기업연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저탄소 생산, ICT 융합 등 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도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을 통해 24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고용 180명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농지전용 등 특례를 적용해 기업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통한 생

산·가공·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심의 통과를 계기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고시 및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설명회와 지원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농생명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 익산 동물용의약품, 장수 저탄소 한우, 임실엔지니어링, 순창 미생물지구 4개소를 추가 지정계획으로 전북특별법 출범 의의와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0일 도의회를 방문한 에디 컨거 미국 텍사스 국제리더십재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교류협력 강화

도의회-텍사스 국제리더십재단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미국 텍사스 국제리더십재단과 상호 학생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10일 도의회를 방문한 에디 컨거 미국 텍사스 국제리더십재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양국 학생들이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지난 제11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부터 에디 컨거 이사

장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간담회 후 에디 컨거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은 의회 본회의장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문 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전북과 텍사스를 잇는 가교가 되어, 미래 세대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정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텍사스 국제리더십재단은 달라스, 포트워스, 휴스턴 등 텍사스주 동남부 지역에서 초·중·고교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비영리 교육재단이다. /이만호 기자

이 대통령, 서민경제 살리기 전면적 정책 행보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비상계엄의 여파로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 정책 행보에 나섰다.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닷새 만인 9일 두 번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경제 현안을 직접 진두지휘했다.

1차 회의에서는 밤늦도록 진행된 회의에서 경기 침체와 내수 위축에 대한 전반적 진단이 이뤄졌고, 2차 회의에서는 급등하는 생활물가와 추경 예산 편성, 실무 중심의 조직 개편 등 실행 단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9일 2차 회의에서 “라면 한 개에 2천 원한다는데 사실인가?”라며 물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물가 급등에 강한 우려
“물가 문제, 국민 고통의 핵심... 모든 수단 동원할
경기 회복·소비 진작 위한 추경 집행에 속도 내야
취약계층·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해 우선 지원”

물가 급등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물가 문제는 국민 고통의 핵심”이라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다음 회의 전까지 각 부처에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즉각 반응에 나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우선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의 참여자 구성도 확대됐다. 기존 차관급 중심에서 벗어나 과장, 국장급 실무자들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정책은 실무자들의 의견에서 출발한다”며 “필요하면 실무자도 자리에 앉히라”고 당부했다.

1차 회의가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과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회의는 실행과 속도에 방점이 찍혔다.

대통령의 직접 주재하에 이뤄진 두 차례 회의는 단순한 논의 수준을 넘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값 정책’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이날 중 추경안 구체화와 함께 물가 안정 방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한 도민은 “국정 운영의 무게추가 이제 정치에서 경제로 이동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관건”이라고 말하며 과단성 있고 시의적절한 이 대통령의 빠른 물가 안정 대책 행보에 기대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